

직장인 2명 중 1명 '빛에 허덕'

잡코리아 설문 45% 응답... '빛내서 빛 갚는다' 도 37%나

직장인 2명 중 1명은 빛을 지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남녀 직장인 10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인 명의의 빛(대출)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5.2%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기혼 직장인 중에는 과반수 이상이 갚아야 할 빛이 있다고 답했다. 빛이 있는 직장인 중 36.9%는 빛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빛을 내 가계경제를 영위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중 34.2%, 30대중 48.8%, 40대이상 중 56.6%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빛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직장인(55.0%)이 여성 직장인(37.4%)보다 많았다.

부채의 규모는 기혼직장인은 평균 5486만원, 미혼직장인은 평균 2012만원, 전체 응답자 평균 3494만원으로 집계됐다.

기혼직장인 중 부채가 있는 비율과 금액이 모두 높은 것은 기혼직장인 중 내 집 마련을 위해 빛을 진 응답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빛을 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조사한 결과, 기혼직장인 중에는 '내 집 마련' 때문에 빛을 갚는 응답자가 68.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외에는 '생활비' 때문에 빛을 갚는 응답자가 15.1%로 많

았다. 반면 미혼직장인 중에는 '등록금(36.7%)'과 '생활비(35.6%)' 때문에 빛을 갚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빛을 내면서까지 내 집 마련 이유에 대해서는 '그 때 아니면 내 집 마련을 못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자가 48.9%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구입하고 싶은 집을 발견해서(17.4%)', '맛별이를 할 때 내 집 마련을 하려고(12.6%)', '서울에 살기 위해(12.6%)' 빛을 내서 집을 구입했다는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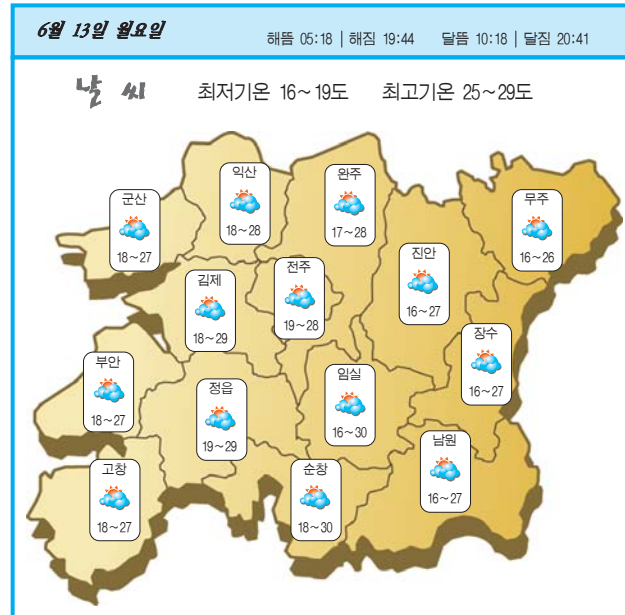
빛이 있는 직장인 10명중 4명은 '빛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빛을 낸 적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 중에는 '이자나 원금을 갚을 돈이 없어서'라는 응답자가 37.8%로 가장 많아, 빛으로 가

계경제를 영위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빛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 정도는 매우 높았다. 빛이 있는 직장인들에게 '빛에 대한 부담이 있는가' 물었더니 '조금 크다'는 응답자가 47.3%로 가장 많았고, '매우 크다'는 응답자도 43.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빛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거나(8.2%) 전혀 없다(1.2%)는 직장인은 극소수에 그쳤다.

빛을 갚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기혼직장인 중에는 5년~10년 이내에 갚을 예정이라는 응답자가 3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5년 이내(31.7%), 10년~15년 이내(17.1%) 순으로 조사됐다. 미혼직장인 중에는 5년 이내라는 응답자가 58.1%로 과반수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안진수 기자



지역 청년 일자리 해법 찾기

전주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35% 의무채용 법제화 요청

전주시가 청년들이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한 청년희망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0일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국민연금공단 등 4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인사업무 부서장들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35%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10개 혁신도시와 관련 12개 시·군을 대표하는 전북혁신도시협의회장으로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한 필요성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날 간담회에 이어 13일에는 전국 10대 광역권(부산,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경남, 충북, 대전, 충남)대학생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14일에는 전주에서 열리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서 국내 혁신도시 지자체간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제정과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추진, 청년팀 신설, 청년창업 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최근 구직난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청년희망도시를 구축하고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주시의회의 건전한 협조하에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를 서단이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했다.

이 조례는 청년들의 복지와 권익증진,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 청년들이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청년의 잠재적 능력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됐다.

시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 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조례에 따라 향후 5년마다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명시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을 수립기로 했다.

/김영재 기자



서남대학교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등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서남대 정상화 촉구 교육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부는 구재단의 정상화계획서를 즉각 반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 "교육부, 구 재단 정상화계획안 반려하라"

서남대 교수협의회 등 내부구성원들이 교육부를 항의방문하며 구 재단 측 정상화계획안의 반려를 요구했다.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직원노조는 지난 7일 교육부 항의 방문과 금일 이영 교육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구재단이 제출한 정상화 보고서 반려 등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구재단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언

항의방문서 강력 촉구

론에 보도한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교육부는 그동안 교비 횡령금을 비롯한 중·장기 정상화계획에 따른 추가 자금을 대한 입출금 내역 등 반드시 현금 입금을 요구했다"면서 "재정기여자로 선정된 명지료법인과 의과대학 협력병원인 예수병원 유지재단이 제출한 정상화보고서에는

자금내역이 불투명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보완요구 및 반려하였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재단이 제출한 정상화계획서에서도 현금 및 현금에 준하는 계획이 없음에도 가장 최상의 계획이라며 접수와 동시에 연탄에 배포해준 시민연대 등과 함께 교육부와 구재단을 상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교육부가 불허했던 정상화 기준이 교비횡령에 연루돼 임원 취소 승인된 구)재단에게 허용함으로써 학교를 비리재단에게 돌려주려는 계획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역 정치권과 그동안 서남대학교 정상화에 동참해준 시민연대 등과 함께 교육부와 구)재단을 상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4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부안참뽕

부안참뽕 특산품으로 오복(五福)을 나누세요!

구입문의



부안군청	063)580-4831
부안병영농조합	063)581-2331
남부안농협	063)581-3015
하서농협	063)584-6481

